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555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김동주 • www.krihs.re.kr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 1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고, 장래 더욱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인구감소 =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인식이 팽배
 - 2014년 도입된 지방창생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자 증가 → 소비여력 저하 →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 고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지역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수단의 일환임
 - 일본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경제력의 저하가 일본 경제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2060년 인구 1억 명을 확보하여 활력 있는 일본사회 유지를 정책목표로 설정
- 2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을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 이를 지원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2015년), 부처별로 관련 시책을 추진 중
 - 내각관방대신(총리)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 비전(2060년), 창생종합전략(2015~2019년)을, 도도부현·시정촌은 ‘지방관 창생종합전략’을 수립·추진 중
 - 중앙정부 차원의 창생종합전략에서는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을 위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13개의 주요 시책(정책패키지)과 평가·지원을 강화
- 3 지방창생 실현을 위해 “Compact + Network” 원칙에 충실한 지역공간구조로의 재편을 촉구·지원
 - 대도시, 지방도시, 중산간지역별 발전방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compactness’를 높이기 위한 도시·지역 공간구조 재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등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시 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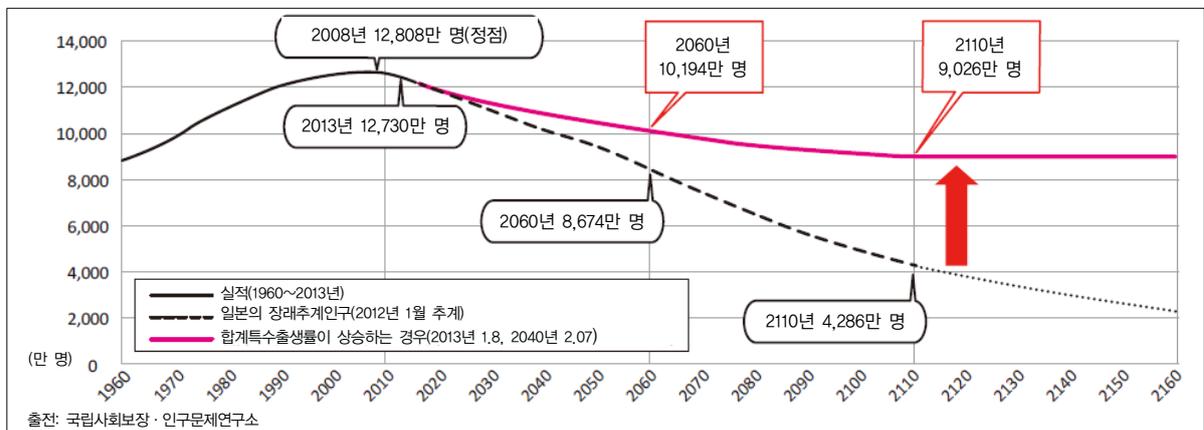
- 1 일본 아베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로컬 아베노믹스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지역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사람’과 ‘일자리’ 선순환 기반을 확립하고, 이들을 ‘지역’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소기반(place-based)의 지방창생정책을 도입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
- 2 지방창생 실현과 지역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중산간지역 등의 발전방향과 현황·특성 분석을 토대로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Network)’ 원칙에 충실하도록 지역공간구조의 재편을 유도·지원하고 있음
- 3 향후 인구감소·노령화와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농산촌지역 등의 도시·지역공간구조를 보다 콤팩트하게 재편·정비하여 ‘지속가능하고 살기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1. 인구감소시대,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지방창생’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

- 일본의 인구는 2008년 1억 2,808만 명(고령화율 23.0%)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8,674만 명(고령화율 39.9%), 2110년은 절반 이하인 4,2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인구감소 상황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인구감소 단계를 1단계(젊은 층 감소, 노인 증가), 2단계(젊은 층 감소, 노인 유지·감소), 3단계(젊은 층과 노인 감소)로 분류할 때, 도쿄도와 중핵시는 1단계, 지방은 2단계·3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

그림 1 일본의 인구추이와 장래인구 전망(1960~2160년)



자료: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사무국(内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2014)의 장래 일본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망은 일본 사회에 큰 위기의식을 야기시켰고, 이를 기초로 아베정부는 인구감소시대의 일본창생 도모를 위해 ‘지방창생 전략’을 채택

- 마스다 히로야(2014)는 인구감소로 인해 1,727개 시구정촌) 가운데 896개가 소멸 되고, 이 가운데 523개는 인구 1만 명 이하 지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
- 국토교통성은 장래 인구전망을 토대로 인구증감지역과 무거주지역을 추정하여²⁾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과 지방창생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그림 2 일본의 인구증감지역과 무거주지역화 전망(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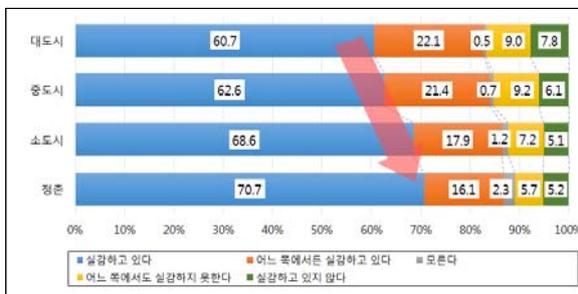
자료: 内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1) 평성대합병 등 추진으로 시정촌 수가 3,232개(1999년) → 1,821개(2006년) → 1,727개(2010년)로 감소되었음.
 2) 2050년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점의 비율이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며,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거나 무거주화 지점이 현재 거주지역의 약 63%에 달하며, 특히 현재 거주지역의 19%가 무거주지역화할 것으로 전망함.

●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하고 로컬 아베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창생정책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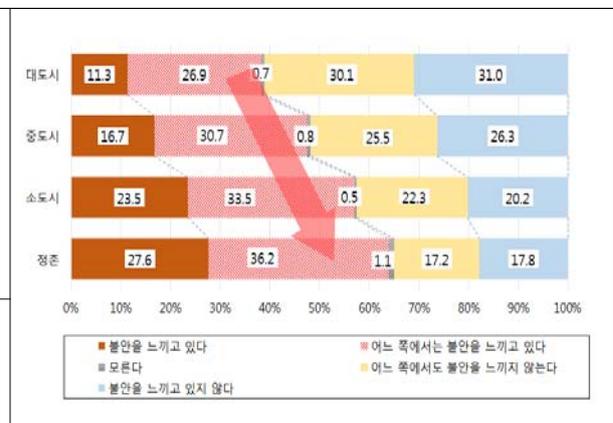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자 아베정부는 ‘일본창생=지방창생’이라는 정책현안 인식을 토대로 로컬 아베노믹스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규모가 축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저하되며, 지방에서는 지역경제 사회의 유지가 중대한 위기국면에 직면할 우려
 -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경제력의 저하는 일본 경제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2060년 인구 1억 명을 확보하여 활력 있는 일본사회 유지를 정책목표로 설정
 - 국토형성계획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거주지의 인구감소를 더욱 실감하고 거주지의 장래에 대한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2015)
 - 거주지의 인구감소 실감도: 대도시(60.7%), 중도시(62.6%), 소도시(68.6%), 정촌(70.7%)
 - 거주지의 장래에 대한 불안도: 대도시(11.3%), 중도시(16.7%), 소도시(23.5%), 정촌(27.6%)
- 아베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도쿄권의 인구집중 방지, 그리고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 확보를 통한 미래 일본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지방창생법」을 제정(2014년)
 -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의 설치·운영 및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국가계획, 지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창생의 기본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행 중
 -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추진을 위해 기존 정책의 효과가 저조한 요인³⁾을 검증하고, ① 자립성, ② 장래성, ③ 지역성, ④ 직접성, ⑤ 결과 중시를 5대 기본원칙으로 설정
 - 지방창생의 기본적 관점: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적극적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 첫째, 도쿄일극집중의 시정, 둘째, 젊은 층의 취업, 결혼, 자녀교육에의 희망 실현, 셋째, 지역특성에 부합한 지역현안과제의 해결을 도모함

그림 3 거주지의 인구감소 실감 여부



주: 1) 본 자료는 내각부 ‘국토형성계획의 추진에 관한 세론조사’에 의거해 국토교통성이 작성
 2) 본 조사에서 사용한 도시규모 구분기준
 - 대도시는 도쿄도 구부, 정령지정도시
 - 중도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
 - 소도시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
 - 정촌(町村)

그림 4 거주지의 장래에 대한 불안도



자료: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2015, 10)

3) 기존 정책의 효과가 저조한 요인으로는 府·省·廳 및 제도의 분할적 구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일률적인 기법, 효과 검증을 수반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지역으로 침투하지 않은 표면적인 시책,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시책 추진 등을 꼽고 있음.

2.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을 위한 정책패키지와 지원시책

●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의 선순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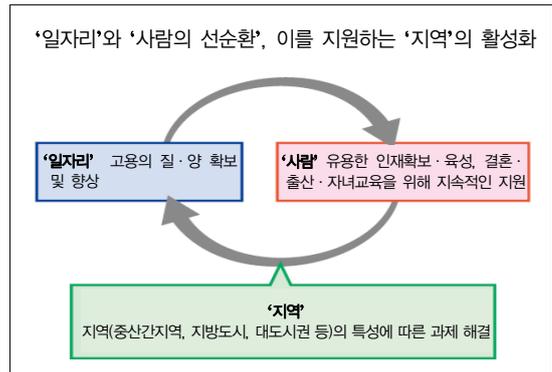
■ **(미래상)** 활력 있는 일본사회의 유지를 위해 2060년 1억 명 규모의 인구 확보·안정화와 함께 2050년 실질GDP 성장률 1.5~2% 유지를 목표로 설정

- 중앙정부의 장기비전(2060년), 창생종합전략(2015~2019년)과 도도부현 및 시정촌 차원의 지방판 종합전략 수립·추진

■ **(기본방향)**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을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

- 일자리창생: 고용의 질·양의 확보와 향상
- 사람창생: 유용한 인재확보·양성, 결혼·출산·자녀교육 지원
- 마을창생: 지방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 해결

그림 5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 구조



● 마을·사람·일자리창생정책의 기본 목표와 주요 추진시책

■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13개의 주요 시책과 평가·지원방안을 체계화

- 지방창생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PDCA(Plan-Decide-Check-Act) 정책단계별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토록 함

표 1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 비전과 종합전략 개요

장기 비전 (중장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문제의 극복: 2060년 1억 명 인구확보 목표, 도쿄일극집중 시정 성장력 확보: 2050년 실질GDP 성장률 1.5~2% 유지
정책 패키지	기본 목표(KPI)	주요 추진시책
사람과 일자리 창생의 선순환	1.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을 창출 (젊은 층 고용창출수, 여성취업률, 재일외국인 관광소비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횡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별) 지방에 인재원인, 지방인재육성 및 고용대책 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2.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지방이주전수, 기업의 지방거점 및 고용자수, 지방대학 진학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이주 촉진 일본판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상의 추진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채용·취업 확대 지방대학 등 활성화
	3.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자녀교육 지원 (젊은 세대 취업률, 남성육아 휴업률, 첫째자녀 출산 후 여성계속취업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선순환 지원, 마을 활성화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 안심생활 유지 및 지역 간 연계 촉진 (작은거점수, 정주자립권 협정체결, 입지적정화 계획 수립, 중고·리폼시장 규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거점(다세대교류, 다기능형 집락생활권) 형성 지원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 콤팩트화와 네트워크 형성,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 대도시권의 안심생활 기반 확보 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

●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 지방창생을 위해 중앙정부는 정보지원, 재정지원, 인력지원을 충실히 제공하고, 지자체는 스스로 자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실행토록 함

○ (정보지원) 지역이 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에 적절한 과제를 도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분석시스템(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을 개발·제공

- 목적: 지역의 현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모습을 객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을 지원
- 특징: 누구나 사용하고, 이해하기 쉽고, 우수지자체의 분석결과를 전국의 지자체가 공유 가능하며, 계속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지방창생 실현 가능(국가와 지자체가 ‘공통의 언어’를 사용)
- 메뉴: 산업지도, 지역경제순환지도, 농림수산업지도, 관광지도, 인구지도, 지자체 비교지도 등 6개 메뉴를 개발·제공 중

○ (재정지원) 지방창생 선행형(지방창생신형교부금 신설, 지방창생가속화교부금 등)/지역소비 환기 및 생활지원형(프리미엄 상품권, 여행권, 고향명물사업 등) 재정개혁, 마을·사람·일자리창생사업비, 지방창생관련 보조금 개혁, 지방창생응원세제 등

○ (인력지원)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 지방창생 ‘콩세르쥬(안내인)’제도 운영, 지방창생인재플랜

○ (기타) 국가전략특구제도, 사회보장제도개혁, 지방분권 및 규제개혁 등⁴⁾과 연계 추진

그림 6 지역경제순환지도: 외래관광객 증가시나리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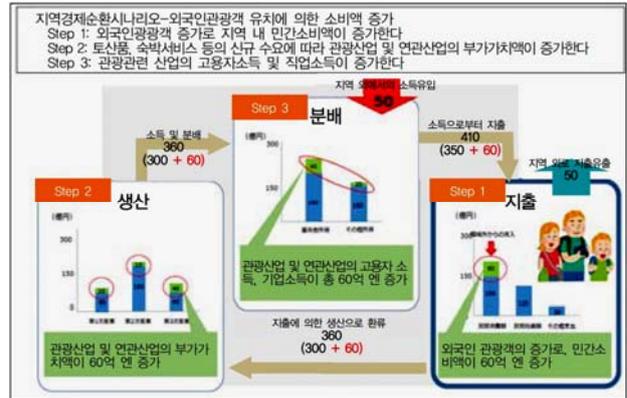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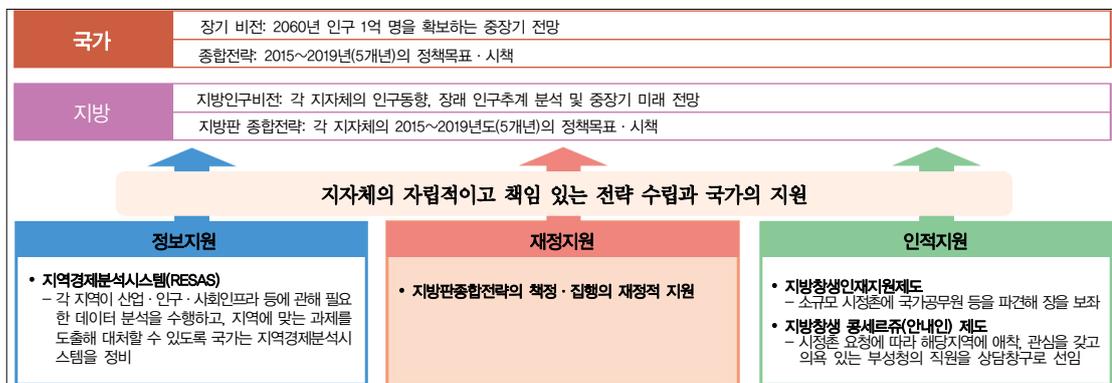


그림 7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4) 내각관방(위원장: 총리대신) 주도의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지방판 종합전략(새로운 수요창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과 국토강인화지역계획(안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구축) 간 연계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상승효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3. 지방창생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의 재편방안

● 지역공간구조 재편의 기본방향: ‘Compact + Network’

- 인구감소와 거대재해 임박이라는 위기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을 수립(2015.8)
 - ‘대류축진형 국토’ 형성을 위한 국토·지역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 ‘콤팩트+네트워크’ 전략을 제시
 - 대류축진을 위한 국토·지역 공간형성전략에서는 필요 기능에 따른 권역인구 확보를 위해 대도시, 지방도시, 중산간지역 등 도시계층별 발전방향과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공간구조의 재편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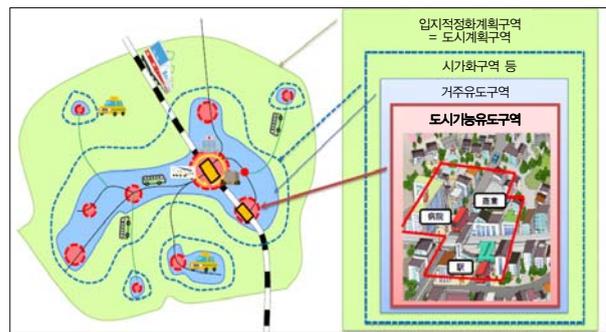
● [Compact] 콤팩트시티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 재편

- (대도시권)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 권역에서 적절히 제공되는 콤팩트한 공간으로 조성
 - 대도시 교외부를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료·복지수요 급증으로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역활력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대도시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역포괄케어’ 실현이 가능하도록 기존 스톡(stock)을 활용하여 의료·복지기능을 적절히 배치할 필요
 -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에 의해 형성된 공공교통(철도 등)을 축으로 대도시구조의 재구축 및 재생을 촉진

- (지방도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간 전체의 관점에서, 다극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로 조성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전개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콤팩트한 공간 조성이 요구되면서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 2014.8)
 - 고령자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고,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정촌별로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 중
 - ‘입지적정화계획’은 도시전체 마스터플랜으로서, 도시계획과 공공교통의 일체화를 통해 콤팩트시티와 네트워크화를 실현토록 하며 지역 내 공공시설 활용 및 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목적으로 함
 -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거주유도구역⁵⁾을 필수적으로 설정토록 하여 콤팩트시티의 형성을 지원

그림 8 콤팩트시티 실현을 위한 입지적정화계획 기본구상



5) 도시기능유도구역은 도시기능을 도시의 중심거점과 생활거점에 유도하고 집약함으로써 각종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도모하는

- 도시공간구조의 콤팩트 수준(compactness) 측정을 위해 생활편리성, 보건복지, 안전·안심, 지역경제, 행정운영, 에너지·저탄소 등 6개 분야 평가지표·측정기법⁶⁾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여, 입지적정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정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시⁷⁾ 공공교통시책, 상업시설, 주택시책, 의료복지시책, 농업시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과 연계가 필요

- **(중산간지역) 작은거점과 주변집락 간 연계를 통해 ‘집락생활권’을 형성**
 - 소학교 등 다수의 집락을 포함한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기능과 지역활동거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모아 주민의 편리성을 증진
 - 작은거점과 주변집락을 커뮤니티 버스 등 교통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람, 물품, 서비스 순환 등 교류거점 역할

표 2 콤팩트시티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 진단 및 평가지표

평가 분야		평가 지표
생활 편리성	거주기능의 적정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서비스의 도보권 충족률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의 인구밀도 생활서비스시설(의료, 복지, 상업)의 도보권 인구커버율 주요 공공교통노선의 도보권 인구커버율
	도시기능의 적정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서비스시설의 이용권 평균 인구밀도
	공공교통 이용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교통의 기반분담률 공공교통 연변지역의 인구밀도
보건 복지	도보활동 증가와 시민의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0만 명당 당노병 입원환자수 도보와 자전거의 기반분담률
	도시생활의 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도보권 내 의료기관이 없는 주택 비율 고령자 복지시설 1km 권역 고령인구 커버율 보육기관 도보권 0~5세 인구커버율 물건 사러가는 이동수단에서 도보가 차지하는 비율 공공교통의 기반분담률
	걷기 쉬운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에 배려하는 도로연장 비율 (도시기능유도구역 보도정비율) 고령자 도보권내 공원이 없는 주택 비율 (공원녹지의 도보권 인구커버율, 거주유도구역 녹지율)
안전 안심	안전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주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재상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보행자환경의 안전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를 배려한 도로연장 비율
	시가지의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공공 공간(거주유도구역) 긴급피난소까지 평균거리
	시가지 황폐화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비율
지역 경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1명당 제3차 산업 매장고 종사자 인구밀도(도시기능유도구역) 도시전체 소매상업 연면적당 매장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능을 유도하는 구역에서 소매상업 효율 공기비율 평균주택지 가격(거주유도구역)
행정 운영	도시경영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1명당 도시구조에 관한 행정경비 시가화구역 등에서 개발허가면적비율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율 공공교통 연변지역 인구밀도 도보, 자전거의 기반분담률
	안정적인 세수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1명당 세수액 종사자 1명당 제3차 산업 매장고 도시유도구역의 소매상업 효율 평균주택지 가격
에너지 저탄소	운수부문 에너지·저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1명당 자동차 CO₂ 배출량 공공교통의 기반분담률
	민간부문 에너지·저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부문 1명당 CO₂ 배출량 업무부문 종사자 1명당 CO₂ 배출량 건축(신축건축물) 에너지기준 달성률

주: 입지적정화계획에 의한 도시기능 및 거주유도구역 설정 시 활용지표 예시임.

● [Network] 지역간 연계 촉진과 지역공공교통체계 강화

-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증가하는 고령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활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연계와 지역공공교통 네트워크 전략을 강화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교권, 간사이, 나고야권 등 3대 도시권의 기능 특성화 및 중앙리니어 신칸센의 연결을 통해 ‘슈퍼 메가리전’을 형성

구역이며, 거주유도구역은 인구감소 속에서도 일정구역에 인구밀도를 유지하여 생활서비스와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을 말함.

6) 도시공간구조의 콤팩트니스(compactness)를 평가하기 위해 생활편리성, 보건복지, 안전·안심, 지역경제, 행정운영, 에너지·저탄소 등 6개 분야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정촌이 입지적정화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토록 하며, 각 지표별 전국평균치, 도시규모별 평균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현황과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장애예측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7) 2015년 7월 기준으로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했거나 추진 중인 시정촌은 198개소임.

- 의료, 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이 원활하도록 인구 30만 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연계중추도시권 및 정주자립권 형성을 촉진
- 지방중소도시는 도시기능유도구역 및 거주유도구역을 거점으로, 중산간지역은 작은거점(compact village)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정비하고, 지역공공교통망 확충 및 수요관리형 교통체계 운영으로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

4. 시사점

- 일본 아베정부의 지방창생정책은 추진내용, 추진방식 및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⁸⁾들도 제기되고는 있으나,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 국가·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고령화→소비여력 저하→경제 침체라는 악순환 고리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유지를 통한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해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구조 형성을 도모
 - ‘사람’과 ‘일자리’의 선순환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이들을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지원토록 하는 장소기반(place-based)의 지방창생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
 - 지방창생의 실현을 위해 대도시권, 지방도시, 중산간지역 등 발전방향과 특성을 토대로 ‘콤팩트와 네트워크 원칙’에 충실하도록 지역공간구조의 재편을 유도·지원
- 향후 인구감소·고령화와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농산촌지역 등의 도시·지역공간구조를 보다 콤팩트하게 재편·정비하여 지속가능하고 살기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참고자료

-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2015.10. 国土形成計画の推進に関する世論調査」補足説明資料. _____, 2015.3. 小さな據点づくりガイドブック.
- 国土交通省 都市局. 2015.6.1. 改訂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について.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http://www.kantei.go.jp/jp/singi/sousei/>). 검색일: 2016.1)
- 内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5. まち・ひと・しごと 創生「長期ビジョン」 「総合戦略」. _____, 2015.12. 地域経済分析システム(RESAS) 第II期リリースについて.
- 上司念. 2015. 地方は 消滅しない!. 宝島社
- 佐々木信夫. 2015. 人口減少時代の 地方創生論. PHP研究所.
- 肥後 洋平, 森 英高, 谷口 守. 2014. ‘據点へ集約から’ ‘據点集約-安易な 政策導入に對する批判的 検討. 都市計畵論文集 49, no.3: 921-926.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 (mscha@krihs.re.kr, 031-380-0190)

8) 佐々木信夫(2015)는 국토정책을 지역정책으로 접근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아베정부의 지방창생정책과 같은 ‘집중형 지방창생’이 아니라 ‘분권형 지방창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형 30구상 제도’를 제안하였음. 경제평론가인 上念司(2015)은 인구감소로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아베정부의 지방창생정책 도입·추진 발상 자체를 반박하고, 오히려 지방소멸은 그동안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경향에 의해 비용(재정)이나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지은 공공시설들로 지방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